

해수부 문건<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¹⁾>의 문제점

416연대 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

2015. 11. 19

1. 조사대상이 조사주체의 조사활동에 개입

- 조사대상인 해수부와 조사주체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입법 및 정부 감시기관인 여당 상임위 위원이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조사대상 및 과제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모의하고 행동계획을 마련

1. 특조위의 BH 조사 건 관련 : 적극 대응

☐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 여당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다수결)**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

☐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 특조위와 소통에서 위원장 배제, 여당측위원 및 파견공무원과 모의

-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간의 파당적 소통, 여당 추천 부위원장과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및 주요파견 공무원간의 파당적 소통을 통해 조사방해를 공모

1)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4.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 (특조위-정부간) 해수부-특조위 여당추천위원간 협조·소통채널 강화

- BH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既 협조요청

□ (특조위 내) '부위원장(사무처장)-여당추천위원 및 파견공무원'간 소통 강화

- (여당추천위원) 정례 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 (파견공무원) 사무처장으로서, 주요 파견 간부(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 11월중 파견 예정)와의 소통 강화

3. 해수부가 위원들의 세세한 행동지침까지 가이드라인 하달, 사주

- 해수부가 위원들의 위원직 사퇴여부, 국회의원들의 회의록 공개 요청, 부위원장(사무처장)의 의안처리 행동요령에 이르기까지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여당 추천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조사방해행위를 사주

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다수결)**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 *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매주 월, 수 : 11.9, 11.11)시 동 건이 11.16일 특조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